



## 에너지가격 인상의 배경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7월 1일자로 액화석유가스(LPG), 경유의 값이 각각 18.2%와 8.2%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예상보다 많은 가정이 누진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에너지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수송용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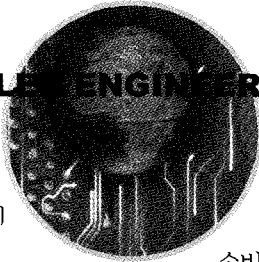
이번 7월 1일자로 단행된 수송용 유류 가격 인상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의한 것이다. 에너지세제 개편은 앞으로 2006년까지 6단계에 걸쳐 매년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가 그 첫해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세제 개편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고유가 상황과 경기 불황이 겹치자 소비자들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지출을 대폭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LPG 차량이 취득 및 보유에 관한 조세에서나, 유지비 면에서나 휘발유차량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 한 해 동안 휘발유 차량은 1.5% 증가한 반면 LPG 차량은 38%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LPG가 비록 저공해 연료라는 장점은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휘발유 대신 LPG를 장려할 이유가 없다는데 있다. 그 까닭으로서서는 우선 원유정제시 LPG 생산비중은 약 3%인데 비해 휘발유는 약 7%로서, LPG는 거의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휘발유에 비해 과도하게 LPG 수요가 증가할 경우 LPG 제품을 추가로 수입해야 하고, 수요가 부족한 휘발유는 낮은 가격에 해외로 수출해서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LPG가 저공해 연료임도 현재 국내에 LPG 전용엔진이 없고, LPG

## BOILER ENGINEERING



자체의 연비가 휘발유에 비해 낮아 주행 거리당으로 볼 경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휘발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 7~10인승 LPG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즉 LPG를 굳이 특수한 차량에만 한정해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전차종으로 확대하되 휘발유가격의 1/2밖에 안되는 LPG 가격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확정,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세제개편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유제품간의 상대가격을 시정하기 위해 2006년까지 6단계에 걸쳐 세제개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현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은 100:54:34이지만, 세제개편이 완료되는 2006년 7월 이면 100:75:60으로 상대가격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유종간 가격을 OECD 등 국제가격 체계 등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휘발유	경유	LPG
OECD국가 평균	100	80	51
2001년 7월(예상)	100	54	34
2006년 7월(목표)	100	75	60

이번 7월 1일자 가격인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우선 수송용 LPG(부탄)의 총 전소 가격이 385원/ℓ에서 455원/ℓ로 18.2%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말 특별

소비세법 개정으로 수송용 LPG의 특수세가 ℓ당 23원에서 67원으로 오른데다가 교육세(10원/ℓ)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경유의 경우 교통세가 ℓ당 155원에서 185원, 지방주행세가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인상됨으로써 679원/ℓ에서 735원/ℓ을 인상되었다.

한편 정부는 7월 1일자로 LPG와 경유의 세율을 조정하면서, 수송용 LPG의 경우에도 영업·화물용은 세금인상분만큼 정부재정에서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줄 계획이고, 장애인인 장애인용 카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세금인상분만큼 할인해 줌으로써 사실상 LPG 세금인상 대상은 일반 자가용 보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분은 연금소득공제 제도 도입, IT산업지원을 위한 전화세 폐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5% → 10%) 등으로 감소되는 세수분 총당용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전기요금

작년 11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력생산비 인상요인 중 일부를 원가에 반영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원칙은 소비절약 차원에서 30kWh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는 평균 6.3%



인상, 401kWh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는 평균 16.6%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간 전력사용량 300kWh이하 가구에 대하여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체 평균요금의 78%수준에 불과한 산업용요금에 대하여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체 평균요금의 78% 수준에 불과한 산업용요금에 대해서는 유가 인상분 수준인 5%를 인상하여 일반용 요금과의 요금격차를 축소하고, 기타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요금은 각각 3%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전기요금 조정에 따라 월300kWh 이하 사용 주택용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0.06%p, 생산자 물가는 0.11%p 상승효과가 있으며, 전기소비는 총 1,183백만kWh (총소비의 0.49%)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제조업은 제조원가 중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0.08%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다.

## 문제점

정부는 누진율을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의 전력사용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당초 전망했던 8.8%보다 훨씬 높은 15% 내외의 가정이 누진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요금체계에선 월 평균 300kWh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하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올해 에너지수요 3.5% 증가

최근 발표된 본 연구원의 '에너지수요전망(2/4분기)'에 따르면, 올해 총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99.3백만TOE로 전망되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본 연구원의 전망치 200.3백만TOE보다 약 1백만TOE가 줄어든 것이다. 이번 전망의 경제성장률 전체(4%)가 지난 4월 전망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에너지수요가 하향 전망된 가장 큰 원인은 2001년 1~4월간 산업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소비 실적치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산업 연료용 석유수요 및 가정·상업·공공부문 석유수요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4.5%, -8.0% 감소 전망된 것이 2001년 연간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요기관의 올해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2/4분기 에너지수요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 주요기관의 2001년 경제전망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저성장 고물가'로 요약된다. 물가는 원화가치 하락,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관리목표(3%)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최근 수정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4.4%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미국 경기회복 부진으로 인해 당초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전

망기관들의 경제성장 전망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3~4%대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반전해 4~5%를 기록, 연간4%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의 향방은 내수보다는 수출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와 투자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는 더 이상의 경기하락을 막아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의 경제전망은 경기 저점 및 회복시기에 대한 견해가 크게 엇갈려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1차에너지 3.5%, 최종에너지 2.3% 증가 전망**

주요기관의 2001년 경제전망

구분	전망시점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수지 (억불)
KDI	01.4.19	4.3	4.2	134
한국은행	01.6.21'	3.8	4.4	130
한국경제 연구	01.6.18	4.3	4.3	142
삼성경제 연구	01.5.15	4.6	4.4	133
IMF	01.4	3.5	4.3	101

2001년도 1차에너지 수요는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성장세 둔화 추세가 올해 하반기에나 회복될 전망이어서, 전년대비 3.5% 증가한 199.3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LNG 수요가 2001년 에너지 수요 성장세를 주도할 전망이며, 특히 발전용 LNG 수요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수요는 경기둔화와 고유가의 영향에 따른

2000년 하반기 이후의 둔화추세가 2001년도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전년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발전용 석유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최종부문 석유수요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낼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은 발전용 수요 둔화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낮아진 4.9%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원자력의 경우, 올해에는 신규 원전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에너지원별 수요 점유율을 살펴보면, 석탄 및 LNG의 비중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 및 원자력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의 비중은 1994년 이후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져 2001년에는 50.8%를 기록, 2000년(52.0%) 수준보다도 1.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LNG의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상회하는 1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LNG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은 최종에너지부문의 전력소비 비중 상승과 더불어 향

1차에너지 수요 전망

원별	2000년	200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석탄 (천톤)	66,525 (12.5)	33,007 (3.0)	36,773 (6.7)	69,780 (4.9)
석유 (천bbl)	742,557 (3.2)	371,976 (-1.8)	376,833 (3.6)	748,808 (0.8)
LNG (천톤)	14,57 (12.3)	9,255 (19.7)	7,7511 (3.6)	17,006 (16.8)
원자력 (GWh)	108,964 (5.7)	53,877 (2.6)	57,013 (1.0)	110,890 (1.8)
1차에너지 (천TOE)	192,674 (6.2)	98,351 (1.8)	100,990 (5.1)	199,341 (3.5)

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1년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제유가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예상됨에 따라 2000년의 149.6백만TOE에서 3.5백만TOE증가한 153.1백만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에는 전 부문에서 1~3%대의 낮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경기하락에 따른 산업부문 수요증가 둔화가 전반적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는 1.6%의 낮은 증가가 예상되며, 가정·상업·공공 부문 및 수송부문은 각각 3.5%, 3.0%의 성장이 예상된다.

원별로 보는 석유제품 최종수요가 -0.1%, 유엔탄은 1.6%, 전력은 7.5% 그리고 도시가스는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석유제품 수요는 경기둔화 및 국제유가 강세에 크게 영향을 받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부문별 수요점유율을 살펴보면, 산업부문의 점유율은 1998년 이후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송부문 점유율은 정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정·상업·공공 부문의 점유율은 과거의 추세가 이어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의 점유율은 전년의 55.9%에서 0.4%p 감소한 55.5%로 전망되며, 수송부문의 점유율은 전년의 20.7%와 비슷한 20.8%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점유율은 전년 23.4%에서 0.3%포인트 증가한 23.7%로 전망된다.

## 에너지 수요 전망의 특징 및 정책제안

### ■ 석유 소비 비중의 지속적 축소

1차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0.4%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1998년 54.6%, 1999년에 53.6%로 하락하였다. 2000년에는 고유가의 충격으로 52.0%로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2001년에는 산업부문에서 중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50.8%까지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1998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왔다. 산업부문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60.7%에서 2000년 57.6%로 하락하였고, 2001년에는 56.5%로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석유 비중의 축소 추세는 1999년 3월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구분	2000년		2001년	
	수치	변경률	수치	변경률
산업 (천TOE)	83,620 (4.7)	41,364 (-0.2)	43,595 (3.4)	84,959 (1.6)
수송 (천TOE)	30,945 (8.1)	15,419 (1.3)	16,465 (4.7)	31,844 (3.0)
가정·상업·공공 (천TOE)	35,021 (1.3)	20,409 (2.3)	15,830 (5.0)	36,239 (3.5)
최종에너지 (천TOE)	149,586 (4.6)	77,192 (0.7)	75,890 (4.0)	153,082 (2.3)
도시가스 (백만 m <sup>3</sup> )	11,963 (19.5)	7,961 (9.4)	5,289 (12.9)	13,250 (10.8)
석유 (천bbl)	698,709 (1.3)	347,612 (-2.6)	350,074 (2.5)	697,685 (-0.1)
전력 (TWh)	239,535 (11.8)	124,870 (7.4)	132,553 (7.6)	257,423 (7.5)
유엔탄 (천톤)	27,024 (4.6)	13,397 (1.9)	14,050 (1.3)	27,447 (1.6)

석유수요의 둔화가 반영되었을 뿐만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LNG로의 연료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 ■ 수송부문의 성장을 둔화추세 가시화

1998년을 제외하고 1999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한 부문은 수송부문이었으며, 2000년도 수송부문의 소비증가율이 8.1%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는 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부문의 연료로는 휘발유, 경유, LPG가 주로 사용되는데, 고유가의 영향으로 휘발유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산업 경기둔화에 따라 물동량 수송의 주 연료인 경유의 증가세도 대폭 둔화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LPG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긴 했으나, 이는 휘발유로부터의 대체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며, 올해 하반기 가격 인상을 포함하여 2006년까지 단계별 가격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LPG 수요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LPG 가격상승에 따른 경유차량으로의 차종선택 변화 등으로 수송경유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 악화 문제가 또 다른 과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

### ■ 전력 및 도시가스 수요 증가추세 지속

1999년 이후 전력수요가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999년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10.7%를

기록하였고, 2000년에는 11.8%, 2001년에는 다소 둔화된 7.5%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1년의 증가율 둔화는 경기 하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력수요는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경우 10%대의 증가세를 회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도시가스의 소비증가율은 1999년 24.8%, 2000년에는 19.2%를 기록하였고, 2001년에도 10.8%의 비교적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2001년의 증가율 둔화는 역사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경기 상승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전력과 도시가스 수요 모두 향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전력의 경우 발전용 연료의 공급 안정성 및 발전설비의 적기 확충이 필요하며, 도시가스의 경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의 추가 도입 대안에 대한 장기적이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에너지절약시민연대, 에너지조례제정 앞장

국내 최초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에너지조례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에너지절약시민연대(대표 최열 등 8인)는 그동안 추진해온 에너지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5일 조례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 표준시안을 확정했으며, 27일 서울시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내에 서울시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례 제정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드문 것으로



조례제정이 될 경우 서울시의 에너지절약에 큰 보탬이 될 것은 물론 전국 각 지자체로의 에너지조례 제정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이 추진되는 에너지조례에는 시내 네온사인 점등시간 제한 및 전광판 크기 규제, 건물 신축시 냉·난방 시설 차단시스템 및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화 등과 함께 서울시 관리 시설의 절전형 조명 교체, 관용차 경차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에너지절약시민연대가 만든 표준시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효성, 열병합시스템 ESCO 주력

(주)효성이 열병합시스템을 이용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열병합설비, 폐열회수장치, 공조설비, 전력설비, 인버터, 고효율모터 등 각종 에너지절감 설비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효성은 자사의 제품을 이요한 ESCO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열병합시스템을 이용한 ESCO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대규모자금이 소요되는 열병합시스템을 ESCO에 적용할 경우 수용가들이 부담 없이 열병합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이 열병합시스템에 대한 ESCO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열병합시스템을 대한 사업을 시작한 바 있어 이 분야에 대해선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스템 최적화설계 기술을 확보해 열병합시스템의 설계로부터 시운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한국가스공사 가스터빈 열병합설비, 창원 공장 차입터빈 발전설비 등 다수의 열병합설비를 설계, 시공한 바 있으며, 현재도 열병합시스템 5~6건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중에 있다.

## 제2차 전기위원회 개최

지난 4월 27일 공식 발족한 전기위원회의 제2차 회의가 6월 11일 전력거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월 2일부터 시작된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4월 중 전력시장 운영 결과 보고 및 2003년부터 도입될 도매경쟁체제 준비를 위한 주요 원칙 심의 등이 이루어져, 전기위원회가 시장 감시·규제 기능뿐만 아니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업무의 실질적인 추진기관으로서의 기능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월 전력시장 운영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전에서 분할된 6개의 자회사들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재입찰 방식으로 전력을 거래하고 있으며, 발전부문의 4월 중 평균 정산가격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시장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시간 전력거래를 통한 가격형성 및 수입예측이 가능해져 발전회사들은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 고효율 발전소의 가동률 제고 및 책임경영 강화 등 발전회사의 경영마인드에도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3년부터 도입예정인 전력도매경쟁체제 준비와 관련하여 주요사들도 안전으로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전력 도매경재 체제는 발전부문에 이어 한전의 배전/판매 부문을 수개의 회사로 분할 함으로써 도매분야에 있어 판매와 구매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으로 양방향 입찰시장 개설이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양방향 전력입찰 시장 설계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대도시 0.3% 저황중유 사용의무화

앞으로 서울 등 저국 7개 대도시에선 황함량 0.3% 이하의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돼 지역 대기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청정연료 등의 시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워터 대기로 오염이 심각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안산시 등 7개 지역 중유사유에 대해 기존의 0.5%이 하였던 황함량을 0.3%이하로 강화하고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0.3% 저황중유 공급시기를 다초 2002년 7월에서 2002년 초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등 저황 중유가 사용되는 7개시에 공급되는 중유 공급량은 매일 121천 배럴로 전국 사용중유의 38%에 해당하며, 0.3% 저황중유 공급에 따라 향후 아황산 가스 배출량은 40%, 먼지는 24% 줄어 들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 기준 중유황함량 기준은 80년대 이전 4.0%에서 81년 1.6%, 93년 1.0%, 97년 0.5%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현재 서울 등 56개 지역은 0.5% 이하, 기타 지역은 1.0%이하의 중유를 사

요하게 되어 있다. 한편 해당지역 일부 업체들은 현재 황 함량 1.0%인중유의 소비자가가 328.38원, 0.5% 중유는 339.44원에 달하고 있는 등 가격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0.3% 중유 사용 의무화는 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산자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산업자원부는 이회법 차관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등 전력유관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철의 전력수급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 유관기관간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여름철의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보다 6% 증가한 4,346만5천kW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진화력 4호기(50만kW), LG복합화력 준공 등으로 공급능력을 48,497천kW를 확보할 계획(공급예비율 11.6%)이므로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 전력 수급 전망

(단위: 천kW, %)

구분	2001	2002	2003
공급능력	46,078	48,497	2,419
최대수요	41,007	43,465	2,458
최대수요증가율	10.1	6.0	△4.0p
공급예비율	12.4	11.6	△0.8p